

분단 60년의 남북 사회문화교류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 및 과제

김병로 (서울대 통일연구소 연구교수)

1988년 서울올림픽이 허문 분단의 벽

분단 60년의 남북관계 역사를 돌아볼 때, 남북한이 교류의 물꼬를 트게 된 계기는 흥미롭게도 1988년 서울올림픽이었다. 공산권과 외교관계가 없던 한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공산주의 국가의 참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산권에 대한 문호개방을 천명하는 '7.7선언'을 단행하였다. 이듬해인 1989년 이른바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남북교류협력법률'을 제정하였고, 이로써 '국가보안법'을 넘어선 남북교류협력시대를 열 수 있었다. 정치도, 경제도 허물지 못한 높은 이념의 벽을 스포츠가 허물었던 것이다.

1989년 이전에도 남북간 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북한이 '대남호소문' 형식을 빌어 정치적 차원의 선전성 제안을 남측에 해오기도 했다. 1971년 9월에는 남북적십자간의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분단 이후 최초로 사회문화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73년 6월 남북간의 정치대화가 단절된 이후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가, 1984년 9월 북한의 수재민 구호품 제의를 남한이 수용함으로써 교류가 재개되었고 이에 힘입어 1985년 9월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실현되었다. 남북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의미 있는 사회문화교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는 '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 근거를 갖지는 못하였다.

1989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제화가 마련됨으로써 법에 근거한 안정적인 사회문화 교류가 시작되었다. 북한주민 접촉과 북한왕래가 법적으로 보장되자 사회문화의 교류가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분단 이후 1989년 이전까지 40여년 동안 남북을 왕래한 사람들은 총 1,151명에 불과하였으나, 1989년 이후 20년 동안 54만 명이 방북하였다. 이렇게 보면 사회문화 교류의 역사는 1989년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류의 양적 성장과 분화

특히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사회문화 교류는 양적 폭증을 가져왔다. 몇 십 명 혹은 몇 백 명에 불과하던 방북자가 1998년부터 3천, 5천, 7천 명으로 늘어났고, 2002년에는 1만2천 명, 2006년에는 10만 명으로 늘었으며, 2007년에는 17만 명에 이르렀다. 양적으로만 본다면 가히 폭발적인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1998년 11월부터 시작된 금강산관광을 통해 193만 4천 명, 2007년 12월부터 시작된 개성관광을 통해 8만 5천 명이 북한을 왕래한 사정을 감안하면 사회문화 교류는 최근 10년 사이에 엄청난 양적 성장을 가져온 셈이다.

이처럼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내에 사회문화 교류의 양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던 데에는 세계사적 탈냉전의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탈냉전의 세계적 흐름을 타고 1990년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으며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어 사회문화 교류가 정치대화 및 남북경협과 함께 제도화된 틀 내에서 추진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남북교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1990. 8)을 조성하고 '남북 사회문화 협력사업에 관한 규정'을 제정(1997년)함으로써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기반을 갖추었으며, 남북정상회담(2000. 6)을 계기로 예술 공연과 스포츠 교류, 민족공동행사 등 전반적인 사회문화 교류가 붓물 터지듯 이루어졌다.

교류의 영역도 초기에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상징적 예술 공연, 스포츠 교류에 머물렀으나 점차 학술, 교육, 언론, 종교, 교통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1989년 이후 2008년 7월까지 교육학술 264건(17,007명), 문화예술 152건(2,427명), 체육 311건(5,085명), 언론출판 290건(2,899명), 종교 390건(8,466명), 관광·교통(금강산, 개성 관광객 제외) 7,352건(104,655명), 과학기술 72건(398명)이 성사되었다. 최근에는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 결성(2007. 2), MBC 주몽제작진 방북(2007. 3), 북한청소년 대표팀 남한 전지훈련(2007. 3) 등 질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00년대 교류의 추이를 보면 예술·문화 분야의 직접적인 교류와 남북 민족공동행사에서의 분과별 교류, 인도주의 지원과정에서의 부대교류 등 세 유형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 예술·문화의 직접교류는 예술단 교환공연과 국제체육대회(시드니올림픽 공동입장, 부산아시안게임·대구유니버시

아드대회) 참가 등 시범적 친선교류로 진행되고 있다. 남북 민족공동행사의 분과별 교류는 민화협과 통일연대, 7대중단의 연합으로 6.15와 8.15에 정례적으로 진행된다. 3.1민족대회와 10.3개천절 민족행사도 종교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인도주의 대북지원 활동과 함께 병행되는 학술, 문화, 교육, 종교 분야의 교류도 새로운 유형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대칭성, 고비용, 도구성의 문제

사회문화 교류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다면적 접촉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 심각한 문제는 교류의 비대칭성 내지 불균형의 문제이다.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인적 왕래에서 방북교류가 주를 이루며 북쪽에서 남쪽을 방문하는 교류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 보내는 것은 기껏해야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술작품 정도이다. 내용면에서도 비대칭성은 심각하다. 북한의 영화나 문학 등 예술작품은 이념성은 차치하더라도 흥행성이 없기 때문에 남한으로 거의 들여올 수 없는 것들이다. 사육신 드라마를 남북이 공동제작했으나 흥행에 완전히 실패하고 조기종영하고 만 것이 대표적 사례다. 종교나 언론 분야도 마찬가지다. 일부 스포츠나 서커스와 같이 북한이 우월한 몇 영역을 제외하고는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일방향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둘째는 고비용의 문제다. 인적 왕래나 예술교류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 초기에는 350만 원 선에서 이루어지던 방북비용이 200~250만 원 선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다. 사실 북한은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 북한 내 자본주의 사조 및 민주적 사고가 유입되는 것을 매우 두렵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 교류에 적극적이지 않다. 식량난과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사회문화 교류를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예술 공연이나 음악회, 전시회, 스포츠교류 등의 성사를 위해 50만 달러 내지 100만 달러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인적 왕래와 사업 방식을 제도화하여 거래비용을 더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사회문화 교류가 여전히 이벤트성 행사에 머물거나 남북화해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남북통일축구대회, KBS, MBC, SBS의 방송사를 통한 남한 대중가수들의 평양공연 등 상징성이 큰 대형 교류협력이 성사됨으로써 남북한 문화에 대한 상호간의 관심을 끌고 이

해를 추구하는 데는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남쪽이나 북쪽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의 교류협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교류가 활발했던 학술분야에서도 고구려와 발해사 등 고대사 관련 교류는 이루어졌으나 체제와 직결되는 근현대사는 논의되지 못했다. 종교분야도 인도의 지원에 국한되었고 교육분야의 교류는 매우 미미하였다. 교류의 주제와 영역이 편협하다보니 남북한 사회문화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보다는 남북화해를 위한 상징적 행사 내지 만남을 위한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교류 패러다임의 전환과 실천 과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우선, 사회문화 분야에서 서로의 독자성을 인정한다는 원칙하에서 남북간의 이질성을 다양성으로 조화·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즉 지금까지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틀에 얽매어 전통적이고 과거지향적인 교류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현재의 남북인이 즐기는 대중문화를 교류함으로써 각 체제의 문화적 이질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식의 교류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다면적, 다층적 네트워크 방식의 교류 구조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문화 교류의 기초가 민족적 감성과 가치를 기초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북한은 “우리민족끼리”의 감정과 가치를 적극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주의 감성을 보편적 시민가치로 확장시켜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학술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며, 문학과 예술, 종교, 언론 등 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남북의 문화적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교류의 차원으로 발전해야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교류의 주제와 영역을 심화시켜야 한다. 학술회의는 컴퓨터, 언어학 등 이념갈등이 적은 분야뿐만 아니라 평화체제, 민족주의 등의 사회과학적 주제나 이질적 역사문제도 다루어야 한다. 또 예술교류에서는 북한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보천보악단’의 서울초청공연을 실시하는 방식도 좋을 것이다. 남북한 국민 모두 관심을 갖는 축구경기나 농구, 서커스 교류는 남북화합을 도모하는데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 더 크

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과의 접촉 채널을 다원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문화 교류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질적 발전의 속도는 매우 느리고 교류 주체 사이의 관계망 형성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북한 내 사회문화 교류의 행위자가 '민화협'이라는 단일창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간단체와 준정부 기관 등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과의 교류를 시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NGO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정부, 민간, 개인 등 행위자간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도주의 대북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를 통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남북간 사회교류인 인적 왕래는 인도주의 대북지원 모니터링 차원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연간 17만 명이 방북하고 있다. 인도주의 대북지원 활동이 진전되면서 학술교류, 문화교류로 진전된 것은 커다란 성과다. 월드비전의 농업지원과 함께 농업기술토론회가 개최된다든가, 남북 나눔운동의 농촌주택 건설사업은 주택, 문화회관, 유치원, 학교, 병원 등 건설 등 지역개발로 발전하여 사회문화적 영향력 크게 미치고 있다.

기술적 문제이긴 하지만 인터넷 활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법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북한의 서적과 문화상품을 하드카피로 소지하는 것이 불법이라든지, 탈북자와 같이 북한 내 가족을 둔 사람이 북한 내 가족과 전화통화를 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헷갈린다. 따라서 인터넷과 정보화의 진전 속도에 맞게 교류협력에 관한 법 적용 문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방북교육체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금강산관광에서 드러났듯이 방북시의 문제점은 남한 관광객이 보편적으로 겪어하고 있는 여행 질서의 문제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시적인 교육으로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 방문시 행동수칙, 예절교육, 대화 및 접촉요령, 응급사태 대응요령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내용도 소극적 방어 위주의 교육으로부터 적극적 대화법을 구사하는 방향으로 달라져야 한다.

문화적 통일에 대한 기대

해방 후 남북한이 국가발전과 근대화의 전략으로, 그리고 근대 시민사회를 본격적으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사회체제를 강력하게 추구함으로써 남북한에 매우 이질적인 사회문화적 생활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이질적 생활양식과 의식구조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사회문화교류의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남북한 민족의 이질성을 극복한다는 당위적 목표를 넘어서 남북한 사회의 다원성을 인정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다원주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식의 토대위에서 사회문화 교류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 교류는 남북의 문화적 통일이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남한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급속히 발전한 한국문화는 한류열풍으로 조선족, 고려인, 재미·재일교포 사회를 '흡수'했으며 세계문화로 성장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과의 문화적 접촉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연변 조선족, 연해주 고려인, 재일교포들과 함께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교류를 증대하는 것은 한민족의 문화적 통일을 촉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남북화해의 무드를 타고 지난 20여 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한 사회문화 교류가 최근 핵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위축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북미관계의 급진전으로 해빙무드를 맞았던 6자회담이 다시 긴장국면으로 바뀌면서 남북왕래와 문화교류도 크게 움츠러들었다. 이럴 때일수록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사회문화 교류는 더욱 필요하다. 남북 당국간 대화와 왕래가 하루속히 재개되어 사회문화의 각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의 문화적 통일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